

경제思想의 변화(공급측면 경제학의 시험)

The changes of economic thought (The trial of supply-side economics)

서홍석 *

〈目次〉

一. 머리말	七. 공급측면론자들의 몇가지 제안들
二. 변화의 조짐	八. 비평
三. 공급측면 경제학	九. 맺는 말
四. 케인즈(Keynes)학파의 경제학	참고문헌
五. 케인즈와 공급측면	Abstract
六. 공급측면론자들과 케인즈학파의 총합적 공급	

一. 머리말

최근에 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경비절감을 외치는 일이다. 인원감축과 임금동결 및 한계사업정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각 재벌그룹들의 임금총액을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계의 감량경영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임금을 동결한다면 우선 신규채용규모가 축소될 것이고 또 임직원들의 감원이 예상되는 것이다. 명예퇴직제도와 인력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금동결과 명예퇴직 등의 감량경영은 내년도와 그 다음 연도까지도 노사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일정한 기간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시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근로시간이나 또는 작업단축을 하거나 하는 등의 합리적 제도가 확립되어서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임금수준이 선진국수준에 또는 그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생산성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액이 우리보다 더 많은 나라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매출액에 비교한 인건비의 비중이 외국의 경우보다 높다는 것이다. 1986년 이후 10년

* 경희호텔전문대학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간 국내기업의 임금상승률은 년평균 16%에 이른다는 것이다.

임금률이 높이 치솟을 때는 고용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또 해고되는 인원도 많을 것이며 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수도 있다. 노사관계의 제도개선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임금률상승은 특히 민주화바람을 타고 시행된 노동법개정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1987년에 근로기준법개정때 4주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가 폐지되고 1989년에는 법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어서 인력난과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선진국들의 노동시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소위 말하는 3저(低)에 힘을 얻어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던 때도 있었다. 이때에 해외투자자와 해외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자본시장을 개방했고 또 증권시장에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증대시켰으며 해외여행 자유화와 더불어 해외여행경비를 1인당 1만달러로 증액시키는 등 외환자유화도 확대시키는 등 국민의 과소비풍조가 심해졌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나라의 소비성향은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해외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현지의 임금수준을 비교한다. 물론 땅값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제 와서는 높은 이자율과 높은 임금률 및 높은 땅값이라고 하는 이른바 3고(高) 비용시대를 맞게 되었다.

기업들은 비용이 낮은 외국투자를 늘리게 되니까 국내산업의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생길 것이며 특히 경쟁력있는 첨단산업들마저 정부의 규제를 피해 외국으로 빠져나갈 때는 물론 국내의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며 국내생산총액(GDP)이 감소할 것이고 또 구매력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땅값이 비싸니까 특히 부동산투기로 재미를 보려고 기업의 막대한 운전자금이 부동산에 묶여서 자금부족현상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기업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기업들이 앞을 다투며 외국상품을 수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또 스스로 노력하기 보다는 정부의 시책을 살피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적인 매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경제성장은 생산액증대이니까 경제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업률이 높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경제정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어렵다.

"가격파괴"의 바람은 비용을 줄여서 판매가격을 낮추어 경쟁에서 이기자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기술개발투자가 증대되어서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활용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말이다. 과연 우리 나라가 수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도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때는 그러저럭 꾸러 나갔다고 하더라

도 이제 국제원자재값이 인상되고 또 국내의 임금수준이 인상된 오늘에 와서는 경쟁력있는 기술혁신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은 무엇인가? 충분한 천연자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인적자원이다. 즉 사람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우수한 두뇌를 이용하는 기술입국(立國)이라는 말이다.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몇 개의 재벌그룹에 의한 반도체와 철강, 석유화학 및 자동차 등 주력업종 몇 개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산업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부족한 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자금의 수요가 많고 또 소득수준이 낮고 실업률도 높았기 때문에 저축여력이 없어서 자금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높은 금리의 원인이라고 하고 또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국내 금융시장의 비효율성도 높은 이자율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도 방만한 경영을 지양하고 책임 경영체도를 정착시켜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명목 시장금리는 아직 12-13%의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일본과 대만 및 싱가포르 등 수출경쟁국들의 금리는 현재 년 2.6%선인 것이다. 우리의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질 금리수준이 일본이나 대만의 3-4배에 달하니까 비싼 이자부담을 안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업들이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우리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률(대출액 대비 금융비용)은 1995년도에 5.6%인데 일본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률은 1994년에 1.6%이고 대만은 1.7%이다.

자유무역론에 기초를 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본래 자본주의 경제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완전경쟁적인 자본주의 경제사회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가격파괴의 바람은 계속되고 있다. 경쟁이라는 것은 첫째로 가격경쟁이고 둘째는 품질경쟁이다.

최근의 미국 경제사회는 활발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국내생산총액(GDP)은 금년에 2.3%의 증가율을 기록해서 95년도보다 0.3%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발표되고 있다.

1997년도에 2.3%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주택건설이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침체될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미국의 경제전문가 협회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996년도와 1997년도에 각각 3%를 기록할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의 걱정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금리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1996년 8월의 미국 제조업분야의 생산액은 소비물량을 앞서고 있으며 소비자출액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실업인구는 차츰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미국의 경제정책은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1980년 이후 특히 주목할 것은 인플레이션 회계처리의 권고라든가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을 도입하고 10여년이 지났다는 점이다.

二. 변화의 조짐

(1) 김영삼행정부의 정책

1993년 2월 25일에 있었던 김영삼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살기 좋은 사회와 신바람 나는 경제를 외치면서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의 집무가 시작된 뒤에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한국건설이라는 개혁바람을 일으키는 목표를 세웠다.

1993년 3월 22일 발표된 "新경제 1백일 계획"은 행정과 금융 및 재정분야의 제도개혁추진의 발판을 짧은 기간내에 구축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내용은, 수요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중소기업 지원강화, 행정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주요 시책으로는, 공금리 추가인하와 대폭적인 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公共투자사업의 조기 집행과 신속적인 통화관리, 경제행정 규제완화, 주요 생필품가격의 정부측 특별관리 등이다.

新경제 5개년 계획(1993-1997년)이 1993년 7월2일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1998년에는 1인당 국민생산총액(GNP)이 1만4천달러를 달성하여 선진 경제권에 진입하고 물가는 극히 안정된 가운데 국제수지 흑자국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었다.

新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동안 재정, 稅制, 금융, 행정규제 및 경제의식 개혁 등 4대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것이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발휘를 새로운 발전과 성장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뜻이었다. 新경제 5개년 계획상의 재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996년 예산가운데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1995년보다 5 10% 대폭 삭감하여 편성하기로 하였다.

각 행정부처의 기구를 통폐합하고 조정하였으며 인원을 감축하였고 1996년도부터 소득세 신고 납부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였으며 납세자의 자율신고제를 발표하였다.

1993년8월11일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5년7월의 부동산 실명제와 더불어 1995년6월27일 선거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1995년 9월14일에는 1996년도부터 근로소득세를 최고 34%까지 경감시킨다고 발표하였다.

(2) 1980년도 미국의 대통령선거 유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 모두의 대통령후보들이 1980년도의 선거유세에서 이야기한 많은 약속들은 공급측면에 속한다. Regan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바로 Regan행정부의 구성원들가운데 많은 논의가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해서 있었다.

세금인하, 소득세의 指標化, 가속화된 감가상각방법, 신규투자에 관한 조세환급, 개인 연금계정에 기부하는 免稅기부금을 확대시키고 완화한다. 배당소득에 관한 면세점을 높인다. 이자소득에도 비슷한 免稅를 적용시킨다.

不勞소득에 관한 세율을 인하시킨다, 사립학교 수업료지불에 관해서 조세환급이나 아니면 다른 세금인하를 한다, 유류 및 뜻밖의 황재이익세로부터 구제한다, 주택구입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저축한 돈에 관해서 세금공제나 아니면 면세따위에 관한 논의였다. 이러한 모든 대책들은 공급측면을 생각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논의가 Regan행정부의 구성원들사이에 진행되는 동안에 대통령자신은, 3년동안에 걸쳐서 세금을 30%인하하겠다는 약속과 연방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약속, 정부규제를 완화시키는 약속, 가속화시키는 감가상각방법의 권고, 또 저축과 투자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세환급과 다른 대책들을 약속하면서 공급측면의 생각이 표현되었다.

Regan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 몇주일동안에 연방정부직원 고용의 동결과 정부의 공무원 여행감축을 지시했으며 "임금과 물가안정 위원회(Council on wage and price stability)"를 폐지했고 또 수천개소에 이르는 연방정부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가 되는 연방정부의 다른 사업들을 감소시켰으며 172건의 미결사항인 연방정부의 규정들을 동결시켰고 또 정부자문역의 이용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그외에도 1981년2월18일에 그의 "경제회복계획(Economic Recovery Program)"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1981년의 현 예산에서 55억달러를 감축한다.
- (2) 1982회계년도의 연방정부 세출을 499억달러 감축하고, 1983년에는 797억달러를 감축하며 1986년까지는 1,268억달러를 감축한다.
- (3) 1981년7월부터 시작해서 3년동안에 총괄적인 Kemp-Roth형태의 10%년간 개인 소득세를 감축한다. (4) 3년이상에 걸쳐서 투자소득(不勞소득)에 부과하는 최대한의 損益點 세율을 70%에서 50%로 인하시켜서 임금소득과 봉급소득인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최대세율과 같게 한다. (5) 최대의 세율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준까지 소득수준을 높인다. (6) 자본原價회수법(Capital Cost Recovery Act(10-5-3 법안)의 설명을 따라 가속화된 감가상각방법을 시행한다. (7) 신규투자에 관한 조세환급이용을 계속하고 증대시킨다.

예산삭감속에 포함되었던 것들은, 기업보조금의 삭감, 식료품표(Food Stamp), 학교급식, 類似연

료비, 수출입은행 활동비, 예술분야와 인문과학분야에 주는 증여, 외국원조, 구호대상자, 신체장애자의 의료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에너지 비용, 실업보상금, 대중교통 및 공영방송 등이다.

Regan대통령은 또한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고 또 300,000개소의 공무원 일자리를 없앨 것을 요청했다. 뚜렷한 지출증가가 있었던 부분은 국방예산이었다.

이 계획을 가지고 Regan대통령은 연방준비은행이 통화공급의 증대를 실질 생산액증대에 맞추어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건의했다.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소위 二重과세를 없앴다는 것이라든가, 수업료 조세환급, 최저임금법수정,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는 免稅點을 높인 것이라든가 따위의 공급측면의 제안들과 또 소득세 指標化들은 장래의 의회요청으로 넘겨졌었다. Regan행정부의 공급측면 경제회복계획은 저축을 고무시키고 투자를 자극해서 생산성을 일으켜서 실질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며 이자율을 낮추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두가지 모두를 감소시키려는 계획으로 작성되었었다.

(3) Carter행정부의 공급측면의 제안

비록 카터행정부가 경제사회를 고무시키고 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수정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수요측면의 정책들을 추구했지만 그것은 공급측면의 정책으로 기울어가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80년의 대통령의 경제보고서는 미국의 생산성 감소, 불충분한 투자, 낮은 비율의 개인저축, 경제적 불안에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제약적인 연방정부의 규정들을 지적했다.

공급측면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급측면의 매력을 제공해서 경제사회의 구조적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특별하게 인용했는데 특히 에너지와 類似연료에 관해서이고 또 투자를 고무시키며 또 과도한 정부의 규정들을 벗어 버리는 것이다.

공급측면 경제학이 경제정책입안자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증거가 의회의 합동경제위원회 회의에 담겨 있었다. 일찍이 1977년에 이 위원회 의장인 Bentsen상원의원과 그 밖의 위원들은 공급측면 세금인하의 가능성에 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1980년 중순에 이 위원회는 세금인하가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내놓았으며 또 스태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공급측면의 정책들 몇가지의 응용을 끌여 들였다.

더 한층 지적인 것은, 공급측면 경제학은 더 널리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며 또 결국에는 어떤 행정부가 집권하고 있는지 수요측면정책 또는 케인즈학파정책들과 결합될 것이라는 내용이 1981년 떠나는 카터행정부의 경제보고서에 담겨 있었다.

1981년 보고서에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정책들의 통합"이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축과 투자에 매력을 주는 세금인하는 빠른 생산성증대에 기여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금인하와 재정정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특수한 세금인하는 개인소득세를 인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도로 저축과 투자 및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듯하다.

둘째로, 생산성이 증대되도록 유도하는 세금인하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도움이 될 정도로 개선시킬 것이지만은 밑에 깔려 있는 10%의 인플레이션율의 상황에서는 아직도 비교적 정도에 넘치지 않는 수준이다.

셋째는, 어떠한 세금인하라도 몹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반해서, 공급반응은 수요반응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특히 단기간에 있어서이다.

넷째는, 영업세와 개인세 두가지稅 모두의 인하는 공급보다도 수요를 더 빨리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영업세와 개인세는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수요억제에 일치되도록 계획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조세정책이 공급을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조심스럽고 현명한 재정정책을 계속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최근에는 공급을 증대시키는 조세정책의 잠재적 價値를 평가하게 됐다고 인정하면서, 이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수요억제의 필요성에 관해서 어렵게 배운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三. 공급측면 경제학

(1) 공급측면 경제학을 제기한 배경

과거 몇십년동안 소득과 지출관계분석에 근거를 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대책들을 완전히 펼쳐 버리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중의 물자관리를 포함해서, 임금과 물가관리, 배급제도, 생산자 보조금, 증가된 개인세와 법인세, 초과 이득세, 대출관리, 인력관리, 자발적 저축과 어느 정도의 강제적 저축을 포함하는 인플레이션대책들의 전반적인 부분을 운영했다. 그 대책들의 목적은 경제사회에 있는 인플레이션압력을 감소시키고 방위산업을 위해서 정부지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하여 경제사회의 민간부분에 있는 소비와 투자 두가지 모두의 유효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사이의 관계를 교환하는 것을 나타내는 Phillips곡선이 人氣있는 것이 되었던 때 도 있었다. 임금과 물가의 강제적 통제가 나온 때 도 있었다.

유별난 강제적 대출금통제도 있었고 또 화폐공급을 긴축시키는 노력으로서 양심에 호소하는 도의

적인 권고를 하기도 했다. 평화시의 강제적인 임금과 물가의 통제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모든 대책들이 케인즈학파의 인플레이션대책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를 통하여 경기침체를 상쇄하고 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각종 대책들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수준을 안정시키려고 케인즈학파 형태의 정책들 또는 수요관리정책들을 계속했지만 점점 더 뚜렷해진 것은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득과 지출관계분석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들이 풍부한 시대에 개발되었었다. 그래서 공급 또는 생산은 유효수요증가의 반응으로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假定을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단순히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생산, 고용, 소득 및 물가들은 점점 더 물자부족, 에너지위기의 재현, 외국과의 경쟁, 국제금융상의 조작, 통화변동, 심리적 요소를 비롯하여 특히 세계의 천연자원의 더 급속한 고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소득과 지출관계분석은 경기침체와 경기불황 및 완전고용이라고 하는 경제사회를 분석하는 또 다른 유형을 제공한다. 소득과 지출관계분석은 완전고용수준에서의 초과수요 인플레이션과 그 처방을 설명한다.

그러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성격을 설명하지 못한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는가?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학자들에게 새로운 숙제가 되었다. 그 원인과 처방은 무엇이나? 경기확장대책들이 인플레이션압력에 보태질 때와 인플레이션대책들이 실업률을 악화시킬 때 경제정책입안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국제환경에서 볼 때 1973 74년의 OPEC통상금지와 1978 79년의 이란(Iran)의 위기로부터 기름가격의 충격이 있었다. 그 사이에도 수많은 충격들이 있었다. 식량부족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더욱 예민한 문제가 되었다.

金本位제도의 포기,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 金값의 인상,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 인출권의 제정, 유동환율제도, 유로달러(Eurodollar)와 기름달러(Petrodollar)의 축적 및 유럽금융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등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1970년과 1974 75년 및 1980년에 있었던 경기침체와 더불어 불만스러운 국민생산총액의 성장률, 높은 실업률, 생산성의 감소, 부족한 투자, 높이 치솟는 이자율, 낮은 저축률, 점점 증대되는 한계 생산능력의 관례와 낮은 기자재의 이용,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비참한 指數의 증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결합, 정부의 결손재정, 낮은 경제성장률이 계속된다는 경제전망, 깊이 스며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 기업의 임원들 또 노동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경제정책들의 환상을 깨치게 되었다.

1970년대의 경제상황변화로 경제사상의 변화가 왔다. 케인즈학파형태의 경제정책과 대책들로서

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및 건전한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계획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몇몇 경제분석가들과 정치지도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케인즈학과형태의 정책들과 대책들은 본래 타고난 약점(결점)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며 또 몇 사람들은 과거 몇십년전의 전통적인 경제학지혜가 1970년대의 경제환경변화에 작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안정화대책들을 올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1970년대에는 케인즈학과의 경제학에 대해서 비평이 점차 증대되었다. 그 이유는 높은 실업률이 있는 동시적인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이다.

경기후퇴와 인플레이션의 共存은 케인즈학과의 이론으로 다스리는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뚜렷이 나타냈다.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자극시키면 인플레이션이 촉진될 것이고 또 만일 인플레이션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의로 수요를 감축시키면 실업률이 증대될것이다.

케인즈학과의 이론과 정책은 전반적인 초과수요로 일어난 인플레이션을 다루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기름과 식료품 따위의 개별적 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일어난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수요인플레이션으로 풀려나오지 않는 원가압력성 인플레이션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케인즈학과의 경제학은 인플레이션을 타고 앉은 1970년대의 半불경기의 복잡한 문제들을 다스리는 데는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론자들이 케인즈학과의 재정정책을 주로 비평하게 되었다. 금융론자들의 정책은 통화량을 규칙성 있게 알맞는 정도로 증대시킬 것을 요구한다. 민간부문 경제사회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금융론자들의 주장은 재정정책이 생산액이나 고용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융론자들은 정부지출액의 대폭적인 삭감을 찬성하고 균형예산을 요구했다. 케인즈학파들은,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필요한 보충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재정정책의 확대정책이나 아니면 기타의 이유로 인해서 고용이 확대될 때는 추가적인 거래수요에 재정조달을 할 수 있도록 통화공급의 증대가 필요한 것이다.

케인즈학과의 이론은 순수한 금융정책이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상황하의 조건들을 시험하기 위한 원리를 제공한다. 통화액증대는 투자가 증대되도록 자극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금액만큼의 이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화액증대가 이자율에 많은 효과가 있든 아니면 없고는 유동성선호곡선의 모양에 달려 있다. 케인즈가 생각한 것은, 낮은 이자율수준에서 화폐수요가 매우 높은 탄력성을 갖기 때문에 어떤 점을 넘어서서 통화액이 증대되면 이자율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밑에서 "합리적 예상(rational expectation)"과 "공급측면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라는 말이 나왔다.

(2) 공급측면 경제학의 시도

공급측면 경제학은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이론과 그에 관련된 정책처방에 대항하는 반혁명으로 구성된다. 넓은 의미에서 공급측면 경제학은 아담 스미드(Adam Smith)와 쎄(Jean Baptiste Say)의 고전적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Say의 유명한 "시장의 법칙"이라는 것은 공급이 언제나 그 자체의 수요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한다. 그 점은 케인즈가 자본주의 경제사회는 불완전고용(半失業상태)으로 향하는 본래 타고난 경향이 있음을 보여줄 예정이었던 문제이지만 공급측면 경제학자들은 케인즈의 이론은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말한다.

또 이들은 민간수요가 임시로 감소한 것을 상쇄시킬 계획으로 정부의 결손(적자)지출을 시도하는 것은 경제적 불안정의 근원이 되었다고 비난한다.

이들이 자유방임(laissez faire)으로 되돌아 가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공급측면에 관해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케인즈학파의 수요관리개념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좀 다른 구조의 경제정책을 주장한다.

케인즈학파의 경제학이 실업을 구제하는 데 정치적 매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한동안 득세하게 되었던 바와 같이 공급측면 경제학은 인플레이션을 구제하는데 정치적인 매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1970년대에 관심이 높아졌다.

케인즈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초과수요의 결과이며 다만 경제성장률을 낮춤으로서만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인상시켜서 대처한다. 공급측면 경제학이 주장하는 적절한 시도는 생산을 고무시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시도가 이렇게 정반대로 다른 것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매우 다른 차이가 있다. 공급측면 경제학자들은 소득과 지출관계과정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조세감축이 있더라도, 총합적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케인즈학파의 승수(乘數)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급측면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조세감축이 소비능력을 증대시킨다기 보다는 생산을 고무시키는 일을 한층 더 높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감축이 수요보다는 공급을 더 고무시키기 때문에 조세감축이 인플레이션압력을 감소시킬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빠른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 논리의 표면은 1970년대 초기에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서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대규모의 실업이라는 전례없는 결합을 다루고자 하는 공급측면의 설명이다.

임금인상이 총합적 수요를 억제시켰다기 보다는 총합적 공급을 훨씬 더 감소시켰으며 이때문에 한편으로는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공급측면에 관한 생각이 처음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된 것은 뉴욕의 하원의원인 Jack Kemp

가 인도한 공화당 의원들의 한 집단이 1978년에 총괄적인 30% 조세감축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래퍼(Laffer)곡선이었다. Arthur B. Laffer의 이름을 따서 붙인 래퍼곡선은 조세감축이 매우 고무적일 수 있어서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중에는 조세수입이 증가하게 되어서 조세수입 감소액을 보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공급측면 경제학은 몇가지 점에 있어서 금융론자들의 한 분파이고 또 금융론자처럼 대부분의 공급측면 경제학자들은 결손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화폐공급이 과도하게 급속히 증대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할 것은 결손의 규모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통화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다.

공급측면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세금인하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인하로 인하여 개인들의 저축을 고무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재정조달을 가능케 하는 수단을 만든다는 것이다.

四. 케인즈학파의 경제학

고전학파의 전통과 학설들이 도전을 받았다. 특히 Say의 법칙이다. 의문점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실업이 확산될 수 있었느냐? 투자에는 언제나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는 기회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축자들이 투자자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저축과 투자 사이에 時差가 없느냐? 투자에는 언제나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는 기회가 있느냐?

이러한 의문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원리를 통해서 수정될 수 있는 과도기적 조절불량상태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경기순환현상이라고 설명해서 넘긴다.

소득과 지출관계분석에 따르면, 소득은 생산이 증대하는데 따라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하는데 따라 소비도 증가할 것이지만 소득의 증가율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축액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소득 수준에서는 소비총액 + 정부지출총액과 생산총액사이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의 투자가 요구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만일 모든 상품과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팔려나가게 될 경우에는 높은 소득 수준에서는 보다 많은 저축액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될 것이라는 말이다. 만일 투자액이 저축액보다 많다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든지 하면 경제활동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수축될 것이다.

경제활동이 확장되거나 아니면 수축되는 것은 투자액과 저축액이 같은 수준이 되어서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점이 반드시 완전고용수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생산과 고용 및 소

득액은 투자액변동에 따라 변화된다. 실질국민생산총액은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과 완전고용수준사이에서 변동될 수 있다.

소득과 지출관계분석에 따르면, 경제활동수준을 결정하는 일차적 요소는 투자이다. 단기적으로는 소비함수가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정부지출액도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면 투자액이 증가되지 않고는 고용수준이 증가되지 않는다.

그런데 소비함수가 크면 클수록 어떤 주어진 수준의 소득과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투자액은 적어진다. 비록 투자액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감소되는 데 따라 경제활동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액+정부지출액이 생산총액과 같게 되는 점아래로 떨어지는 양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수준에서 유효수요액이 생산총액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생산이 유효수요보다 적기 때문에 수요총액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재고품에서 상품공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생산총액(GNP)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재고품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도 증가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투자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완전고용을 넘어서서 경제활동이 증가하지는 못한다. 이 점을 넘어서게 되면, 증가된 투자액과 소비액 및 정부지출액은 다만 높은 물가를 이끌 수 있다.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 볼 때, 추가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는, 소비액+규칙적 정부지출액이 생산총액 및 완전고용수준과 같게 되는 수준사이에서 변동된다.

그런데 경기는 좋든가 아니면 나쁘든가 하는 어느 극단적인 어느 한쪽에 도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증간점사이에서 잘 변동된다. 그래서 경기순환은 일차적으로 민간 투자액변동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런데 몇몇 경기변동은 소비액변동이나 아니면 정부지출액변동이나 또는 이 두가지 모두의 변동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변동이나 소비액변동을 상쇄시켜서 경제활동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투자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경제사회가 바람직하지 못한 고용수준에서 안정된다면, 유효수요총액과 국민생산총액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액과 투자액을 고무시킬 목적으로 여러가지 경제상의 대책들을 이용하게 된다. 만일 그러한 대책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경제활동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소득과 지출관계분석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과 두자리數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나쁜병에 걸리기 전인 1970년대 이전에 10여년동안人氣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소득과 지출관계분석은, 강력한 인플레이션압력은 막대한 정부지출액이 없으면 잘 발생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다.

소득과 지출관계분석의 내용을 요약하면, 생산과 고용, 소득 및 물가따위들은 유효수요에 달려 있는 것이고 유효수요는 소비액과 투자액 및 정부지출액의 합계로서 측정된다. 소비액은 그 당시의 소득수준에서의 소득액규모와 평균소비성향에 달려 있으며 소비함수는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도

정부지출액은 중립적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고용과 소득액의 변동은 일차적으로 투자액 변동의 결과가 될 것이다.

투자액은 자본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본의 한계효율은 고정자산과 비교한 이익금예상에 달려 있다. 이자율은 화폐량에 비교한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에 대부분 달려 있고 유동성선호는 저축動機가운데 미리 조심하는 동기와 거래목적의 동기가 어느 정도 강한 것이냐 하는 데 달려 있다.

정부의 지출액은 규칙적인 지출액이거나 아니면 비상지출액가운데 하나인데 만일 소득액과 투자액 및 규칙적인 정부지출액들이 경제활동의 높은 수준을 제공하는 데 불충분하면 국민생산총액과 소득액 및 고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비상정부지출액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어느 결정요소의 변화가 경제활동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변동이 없다고 할 때 소득액의 규모가 증가할 때는 높은 소비액을 가져오고,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며 또 생산과 고용 및 소득수준을 높인다.

그런데 만일 경제사회가 완전고용상태에 있다면 그러한 변화는 물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금선호를 강화하면 이자율을 높이게 될 것이고, 투자액을 감소시킬 것이며 유효수요를 낮출 것이고 또 생산과 고용 및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 반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결손(적자)재정조달은 유효수요를 높일 것이지만 예산잉여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데 이용하지 않으면 경제사회의 활기가 수그러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五. 케인즈와 공급측면

케인즈도 소득과 고용론을 총합적 공급과 총합적 수요라는 말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 케인즈의 이론이 고전학파의 이론과 오늘날의 공급측면경제학 두가지 모두의 용어와 관련을 갖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균형의 총합적 공급과 총합적 수요관계의 유형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케인즈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유효수요의 원리와 경제사회의 균형원리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총합적 수요(aggregate demand)와 총합적 공급(aggregate supply)이라는 말들은 케인즈가 사용한 말들이지마는 경제분석에서 종래에 사용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했다. 케인즈가 말하는 것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관해서가 아니라 가격에 관련시킨 것이다.

케인즈의 소득과 지출관계의 분석은 총합적 수요로서, 이것은 생산자가 고용수준으로부터 얻어지는 생산물판매를 예상한 판매액표(表)이다. 총합적 수요는 소비재와 자본재를 구입하는 그 사회의 지출총액에 달려 있다. 총합적 수요는 생산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

리적이다.

고용수준과 소득수준이 더 높을 때 사람들은 저축할 돈이 더 많아질 것이니까 생산자들이 더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이익금이 생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총합적 공급은 다양한 규모의 종업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필요한 수익표(表)"이다.

고용주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것이니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익금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이익금으로서도 충분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생산을 증가시키면 비용이 증가되므로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종업원을 이용하는 결과가 된다.

이 총합적 공급표는 정상적인 이익금을 포함한 생산비총액에 해당될 것이므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價値총액과 같다. 더욱이 생산요소를 구입하는 데 지불하는 비용이 이 비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되는 것이니까 총합적 공급선(線)은 다양한 고용규모에 있어서의 소득수준에 해당될 것이다.

고전학파의 이론에서는 공급이 스스로 그 자신의 수요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수준의 생산이나 아니면 고용수준에서 공급과 수요는 같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러한 경우였다면 총합적 수요는 총합적 공급선(線)위에 놓일 것이다. 그 유효수요는 생산총액과 같을 것이며 또 생산된 모든 상품은 시장에서 팔려 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생산과 고용이 증대되는 것을 가로 막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소득과 지출관계이론은 이러한 내용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생산과 고용 및 소득이 증대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은 유효수요총액이 생산총액보다 적은 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과 지출관계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경제활동수준에서의 총합적 수요는 총합적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 뜻은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한 수입금이 어떤 주어진 금액만큼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필요한 수입금"을 초과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기업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저축액을 이용하는 경우와 아니면 은행대출금을 소비자나 또는 투자자들이 상품과 서비스구매를 위한 수요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이다.

총합적 공급과 총합적 수요사이의 수입금이 초과 이익금과 같은 것인데 이 초과 이익금이라는 것은 그 수준에서 생산을 하게 하고 또 종업원을 고용하게 하는 데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초과액인 것이다.

예상한 수입금이 필요한 수입금보다 많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물자와 근로자 및 자본재에 투자하는 것을 증대시키게끔 매력을 가질 것이다. 이 추가적인 투자가 생산과 고용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총합적 공급과 총합적 수요 두가지가 모두 증가한다. 그러나 소비는 생산과 소득 증대만큼 증대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원리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한다는 사실때문에 총합적 수요는 총합적 공급(생산과 소득)보다 느리게 증가한다. 결

국 총합적 수요가 총합적 공급과 균형을 이루는 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 균형점에서는 초과 이익금이 없다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균형점을 넘어서면 총합적 수요(예상한 이익금이나 또는 수입금)가 총합적 공급(필요한 이익금이나 또는 수입금)보다 작기 때문에 고용이나 또는 생산을 증대시킬 매력을 찾지 못한다.

경쟁적인 제도아래에서 이 균형점은 경제사회전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금이 된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익증대를 찾는 데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균형수준 이하의 고용이 되지 않으며 또 균형점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 이익금이 줄어들니까 고용이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균형점을 유효수요점이라고 말하는데, 경제사회가 자동적으로 움직여갈 점이 균형점이 될 것이다. 소득과 지출관계이론에 따르면, 균형점이나 또는 유효수요점은 고전학파들이 주장한 것처럼 반드시 완전고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균형점은 완전고용에 미달된 상태의 어떤 수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또는 실업이 확산된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케인즈의 말은, 경제사회가 완전고용상태에 미달된 위치에서 종종 균형상태가 된다는 것이며 더구나 외부의 어떤 다른 세력의 도움이 없는 한 꽤 오랜동안을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소득과 지출관계분석에 따르면, 완전고용수준에 이르게 하는 자동적인 조절이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경제사회가 높은 수준의 고용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한다. 총합적 수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적 요소로 이루어졌다. 소비재와 자본재를 구입하는 수요이다. 다른 말로 하면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라는 말이다.

이 총합적 수요는 또한 정부지출이라고 하는 제3의 세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경제사회가 완전고용에 미달된 상태인 500만명의 고용이 있는 경우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600만명이 고용되는 더 높은 수준으로 경제사회가 움직여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해보자. 이것은 소비나 아니면 투자가운데 어느 하나가 증가되어도 달성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소득이 증대되지 않는 한 소비를 증가시키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또 기업에서는 투자를 증대시킬 매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이용하도록 말했다.

그러한 정책들로서는, 이자율을 낮춘다든가, 세금을 낮춘다든가, 실업보험을 시행한다든가 또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정책들을 제시했다. 사실이지 케인즈가 주장한 것은, 소망스러운 수준의 고용과 생산수준에서 총합적 공급이 교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유효수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결산(적자)지출형태로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을 주장했다.

그래서 600만명의 고용수준으로 높이를 원한다면 소비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투자를 증대시킨다든지 또는 정부지출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들을 결합시킨다든지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득과 지출관계이론에 따르면, 고용수준은 총합적 공급과 총합적 수요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수요가 있는한 또 원하는 만큼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을 그 경제사회에서 구할 수 있다면 충분한 총합적 공급은 나오게 될 것이다.

소득액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는 소득액을 모두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 경제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상품들을 흡수할 만큼 충분한 총합적 수요는 나오지 않는다. 총합적 수요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로 구성되는 것이니까 정부지출이 없는 경우에 고용수준이나 또는 경제활동수준은 총합적 공급과 총합적 수요 및 총합적 투자에 달려 있다.

더 한층 분석하면, 투자는 자본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은 총합적 공급과 소비와 자본의 한계효율 및 이자율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경제활동수준의 전반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세가지의 전략적 변수들로 좁힐 수 있다. 소득과 지출관계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한 공급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수준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첫째로 소비성향이고 둘째는 자본의 한계효율이며 셋째는 이자율이다.

이러한 것들은 생산과 고용 및 소득을 결정하는 데 모두가 중요한 요소들이다. 소비액이 증대되면 유효수요총액을 높일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경제활동수준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생산능력이 증대되어서 또 판매가 증대되어서 또 물가가 높아져서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본의 한계효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증대할 것이므로 유효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자본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사이의 차이가 더 넓어져서 더 많은 투자가 있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유효수요가 더 증대할 것이다. 이 세가지의 변수들이 반대방향으로 변동된다면 당연히 유효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한쪽에서 有利한 변동이 있을 때 다른 쪽에서 일어난 不利한 변화에 의해서 상쇄되는 일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의 전략적 변수들이 관련된 내용이, 경제사회가 완전고용수준에 미달된 상태인 점에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이 변수들사이의 보다 유익한 관계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금을 낮춘다든가, 대출을 완화한다든가, 이자율을 낮춘다든가 또 소비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라든가 또한 다른 대책들도 이용해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간접적인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고용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유효수요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정부지출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정부지출이 자주 일어나

는 것이 되면 결손지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정부가 세금을 높여서 정부지출액을 증대시킨다면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로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이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게 되면 유효수요도 따라서 축소될 것이다.

이 경우에 정부지출의 어떤 이익이 있게 되면 이것은 민간 소비액과 민간 투자액의 감소로 상쇄될 것이다. 만일 정부가 돈을 빌린다면, 세금으로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특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다면 민간 소비액과 민간 투자액은 축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지출은 더 뚜렷하고 소망스러운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경제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정부지출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정부지출의 방법과 방향이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1년 이내의 짧은 기간동안에는 소비성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또 소비액의 증대는 일반적으로 소득액이 증가된 결과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경제사회가 높은 고용수준을 이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효수요의 증가액은 투자액증가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경제활동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액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고 또 고용수준은 투자액변동과 더불어 변동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것이 케인즈의 주장이었는데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을 관찰한 결과였으리라고 믿는다.

특히 1930년대의 상황에서 경제사회가 완전고용수준에 미달된 단계에 있을 것이라는 관찰에서였으리라는 생각이다. 케인즈가 제시하는 것은, 영국의 경제사회와 미국의 경제사회 및 그 밖의 다른 경제사회도 기록적인 실업상태에 있었고 또 고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유효수요가 소비와 민간 투자로부터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이유는 고용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정부지출의 이용을 케인즈가 주장했다. 비록 지나간 과거에 보여준 것이 기록적인 실업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지출관계분석의 원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 뜻은 단지 경기확대정책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총합적 공급과 총합적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총합적 수요를 높이는 대신에 총합적 공급(原價)을 낮춤으로서 똑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총합적 공급과 총합적 수요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은, 공급량에 따라 수요량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량에 따라 공급량이 조절되는 것이므로 공급측면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한다.

총합적 수요와 총합적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고용수준이 결정된다. 만일 이것이 완전고용수준에 미달된 점이라면 또 고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점이라면 총합적 공급을 낮추어 달성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임금을 낮추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총합적 공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

케인즈가 말한 것은 "고전학과의 이론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화폐임금의 감소는 생산에 자극을 주는 분명한 환경속에서 가능한 일이다.(Keynes, John Maynard,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64, p.257.)

케인즈가 논평한 것은, 임금삭감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심리적 역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자주 이용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케인즈에 따르면, 임금을 내리는 것은 완성된 제품의 가격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내리는 것은 임금소득자로부터 기업가라든가 또 不勞소득자(고정소득을 받는 사람들) 따위의 다른 생산요소로 재분배가 될 것이어서 사회전체에는 소비성향이 낮아지게 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임금소득자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非賃金소득자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비록 기업가들이 임금인하로 이익금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처음에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 일어나는 투자와 고용의 증가는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 투자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금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금수준이 인하되면 소비지출이 감소되어 제품판매로부터 생기는 이익금이 차츰 사라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임금을 감소된다고 해서 투자를 증대시킬 것 같지 않다.

케인즈가 제시한 것은, 임금을 낮추는 것은 생산과 고용에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주는데 오로지 그 사회의 한계소비성향이 1이 되어서 소득증가액과 소비증가액사이의 차이가 없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영향을 준다.({})Keynes, John Maynard,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64, p.261 64.)

그런데 총합적 공급은 임금을 낮추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똑같은 효과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더 능률적인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생산성이 높아질 때라든가, 더 좋은 경영기술을 이용한다든가 또 발전된 기자재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높은 수준의 고용을 이룩하기 위해서 소비와 민간 투자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총합적 공급을 낮추기 위해서 原價를 낮추어서 고용인원 총계를 증대시키는 것도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수년동안의 증거는, 기업활동이 부진할 때는 언제나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변화되는 합리적 예상속에서는 임금을 인하시키는 것은 1930년대와 비교해서 그때와는 다른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수익금이 증가되는 결과를 전망해볼 수도 있고 또 자본의 한계효율이 보다 더 영구적인 것이 될것으로 전망할 수도 있으며 또 상품가격이 낮아지는 결과로 판매가 증대하리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이것은 임금양보가 전체적 경제계획의 일부가 될 때나 原價낮추는 계획이 전체적 경제계획의 일부

가 될 때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생산성을 고무시키는 일이 전체적 경제 계획의 일부가 될 때는 맞는 말이 될 것이다.

六. 공급측면론자들과 케인즈학파의 총합적 공급

공급측면론자들은 케인즈학파의 類型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공급측면론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종래의 소득과 생산 및 소비관계의 函數유형은 이제 낡은 것이어서 오늘날의 경제사회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설명하는 구조로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 아니라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케인즈학파의 총합적 공급과 총합적 수요관계의 유형을 말하지 않는다. 이 공급측면론자들이 의미하는 총합적 공급은 케인즈학파가 말하는 의미와는 다르다. 공급측면론자들은 생산단위나 아니면 생산액의 價値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케인즈학파의 생각은 이와 다르게 공급가격으로서의 총합적 공급이다.

그런데 공급측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은 케인즈학파의 총합적 공급과 총합적 수요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공급측면론자들이 제안하는 것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생산을 증대시킬 것이며 또는 공급(공급가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말이다.

법인세율을 낮춘다든가, 새로운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서 조세환불을 해준다든가, 가속시킨 감가상각방법을 권한다든가 또 투자소득에 관해서는 세금을 낮춘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대책과 單位原價를 감소시키는 대책따위는 케인즈학파의 총합적 공급을 낮추는 효과와 또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몇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즉 잠재적 인플레이션은 공급수량이 증대될 수 있다면 상쇄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려면 더 많은 인력과 물자나 아니면 다른 자원들이 요구될 것이다. 수요가 증가되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충격은 공급을 증가시켜서 상쇄시킬 수 있다. 종래의 미시경제학이론의 공급곡선으로서, 만일 다양한 가격수준에서 많은 생산이 제공된다면,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될 것이다. 이 공급의 증대는 낮은 가격의 투입물(액)이나 아니면 낮은 임금액과 에너지, 발전된 기술이나 아니면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들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이지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경영상의 능률이라든가, 근로자들의 강화된 노력이라든가, 낮은 에너지비용이라든가 또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연간이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공급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이 생산성의 증대는 실질소득을 높일 수가 있어서 수요증대가 일어날 것이므로 생산수준이 증가되고 완전고용수준의 생산액이 증대되며 또 비교적 안정된 물가를 이룩할 것을 나타낸다. 특히 생산성 증가를 넘어선 임금률의 증대는 그 경제사회의 균형생산액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노동력의 높은

비용은 기업들이 각각의 가격수준에서 생산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1970년대말의 기름값이 약 30% 올랐다. 여기서는 높은 기름값의 투입으로 인하여 공급이 감소되었다. 공급의 감소는 생산이 떨어지면서 균형생산액수준을 낮추게 한다. 그 외에도 높은 에너지가격은 그 경제사회의 완전고용수준을 낮춘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기름값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노동의 생산성과 자본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며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용이 감소될 때이다. 에너지사용이 적으면 충분히 고용된 노동력으로서의 생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경제사회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은 공급이 증가되어도 명목상의 수요증가를 상쇄시키지 못하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공급의 감소가 된다. 이것은 자연히 순수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생산은 증대되지 않고 물가만 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급측면 경제학은 저축할 매력이나 투자할 매력 또는 일하고 싶은 매력에다 경제정책의 효과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거시경제학유형들은 언제나 세금을 줄여서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과 인플레이션(통화증가)을 나타냈지마는 공급측면이론에서는 세금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을 증대시키며 또한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면 세금공제후의 실질임금이 증대되기 때문에 더 높은 노동참여율을 보여줄 것이다.

케인즈학과와 공급측면론자들의 유형들 모두가,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두 학파의 유형들이 모두 인플레이션을 완전고용현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케인즈학과에서는 소득과 생산관계유형(소비함수유형)이라는 내용으로 유효수요의 감소를 요구하는 것이고 공급측면론자들의 유형에서는 공급량의 증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七. 공급측면론자들의 몇가지 제안들

(1) 래퍼(Laffer) 곡선

세율과 조세수입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내용이다. 사람들은 세금공제후의 임금이 많으면 일을 더 할 것이며 또 투자에 관한 세금공제후의 이익금이나 또는 수익률이 많을 때 투자를 더 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은 결국 더 많은 조세수입을 올릴 것이라는 말이다. 래퍼곡선에 따르면 조세수입이 전연 없는 면세점인 0(zero)세율에서부터 100%의 세율에 이르기까지 두가지의 극단적인 세율이 있다. 0%의 세율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없으며 100%의 세율에서는 사람들은 일을 할 의욕이 없을 것이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없게 된다.

이 극단적인 세율사이의 어느 점에서 조세수입이 최대의 금액이 되는 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세율이 어느 수준인가를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세율들과 또 다른 가능한 세율들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 래퍼효과는 매우 불확실한 조건들에 근거를 둔다. 세금인하가 조세수입에 명확한(결정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최초의 세율이 조세수입을 최대화시키는 가장 알맞은 세율보다 높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현재의 세율이 가장 알맞은 세율이거나 아니면 알맞은 세율보다 낮으면 세율인하는 조세수입총액을 감소시킬 것이다.

래퍼효과의 두 번째 조건은 세금인하규모에 관련된다. 세금인하를 유리한 입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인하를 너무 크게 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세금 인하는 반드시 유리한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할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을 최대의 금액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세금인하는 반드시 올바른 금액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세율이 래퍼곡선위에 어느 곳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의 환경에 따라 사정이 다를 것이므로 몇 %의 세율이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시행해서 빨리 알맞은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 뒤에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조정하듯이 경기대응 정책으로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너욕이 그것이 작용하는 특수한 대책이 없다. 또는 세금인하에 반응을 나타내는 "투자탄력성 (investment elasticity)"에 관한 특수한 대책이 없다. 근로증가로 인하여 조세수입증가가, 낮은 세율일 때 조세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할 수도 있다. 낮은 세율일 때 가처분소득이 증가되므로 사람들은 일을 덜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역시 있는 것이다.

많은 경제분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특히 케인즈학파들의 말은, 사람은 어떤 目標値의 실질소득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세금이 인하되면 그 사람은 목표소득에 맞추려고 일을 덜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세금이 인하되었을 때 근로자들은 餘暇시간을 더 가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케인즈자신도 근로자들이 느끼는 매력에 관해서 공급측면론자들의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다. 1930년대에 있었던 근로자當 근로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해서 고용과 소비증가의 몫을 나누어 갖게 하는 가능성에 관해서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 개인들이 증가된 소득에 비교해서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이 유익한 것이냐를 따지는 점이 된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여가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소득증대를 더 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강하다. 그리고 더 많은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원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 Keynes, John Maynard,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64, p.326.)

물론 1930년대의 근로자들은 낮은 실질소득을 받으면서 덜 복잡한 경제환경속에서 일을 했고, 더

긴 시간을 일했으며 공휴일과 휴가동안에는 급료지불이 없었고, 실업자가 아주 많았으며, 실업보상금도 없었고 또 보통근로자들의 급료총액세나 아니면 소득세가 있었다고 해도 매우 적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는 래퍼곡선은 세율이 0%의 세율과 100%의 세율에서 조세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세율에 따라 나타나는 조세수입을 보여준다. 얼마만큼의 세율변동이 조세수입총액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곡선의 정확한 모양을 알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세율과 조세수입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알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물론, 세율 또는 세금공제후의 소득을 한쪽 축에 나타내고 또 근로의욕을 다른 축에 나타낸 그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비슷한 그림표를 그릴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결점은, 이 곡선은 정부의 수입을 최대화시키는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공급측면론자들이 생산성에 관해서 신중한 관심이 있다면 래퍼곡선의 수평축에 있는 정부수입을 민간부문 생산성으로 바꾸어 놓고 래퍼곡선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공급측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제안한 정책들과 대책들이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말이다. 그들이 더 한층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의 케인즈학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산성의 증대는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말이다.

(2) Kemp-Roth조세법안

미국의 국회의원인 Kemp와 Roth가 제안한 법안으로서 Jack Kemp는 공급측면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법안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1979년의 조세인하법안"(S.33)으로 불렸는데, 이 법안은 3년동안에 걸쳐서 전반적인 개인소득세의 영구적인 인하를 제의했다. 더욱이 1982년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개인의 세율을 인플레이션에 連動시키도록 제의했다. 그 방법은 指標化시킨다는 것이다.

공급측면론자들이 이러한 세금인하를 찬성하는 것은,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세금공제후 증대되는 것은 더 일할 의욕을 갖게 하고 높은 저축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에서이다. 그런데 몇사람의 공급측면론자들은 몇가지의 세금인하를 직접 기업에 혜택을 주도록 원한다.

비록 수요측면론자들은 세금인하가 소비를 증대시키고 또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서 찬성하지만 모든 납세자들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생각은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고소득층을 다른 납세자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는 전제에서 수요측면론자들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인하를 찬성한다.

레건(Regan)대통령은 Kemp-Roth법안의 理念몇가지를 결합해서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공급측면론자들의 내용을 제안했는데 레건이 대통령에 취임해서 집무를 시작한 후에 3년에 걸친 기간동안에 개인소득세를 30%이하시킬 것을 제안했다.

(3) 10-5-3법안

공급측면론자들의 생각에 가까운 또 다른 법안은 "자본原價회수법(Capital Cost Recovery Act)"이다. 이 법안은 HR4646이라고 알려진 것인데 오크라호마출신의 하원의원인 Jons와 뉴욕출신의 Conable이 1979년6월27일에 미국하원에 제출한 것이다. 똑같은 날에 상원에 제출했던 것은 "빠른 감가상각(rapid depreciation) 법안(S1435)이었다.

미국의 "국회 합동경제위원회"의 위원이며 상원 법안 발기인인 텍사스출신의 Bentsen 상원의원에 따르면, 더 빠른 감가상각은 경제사회의 공급측면을 증대시키는 투자를 고무시키는 매우 능률적인 방법이며 또 생산성을 북돋는다는 것이다.

이 Jones-Conable법안은 가끔 10-5-3계획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법안이 제안하는 내용이, 새로운 건물과 구조물은 10년의 감가상각이고 기계와 설비는 5년의 감가상각이며 또 자동차와 택시 및 작은 트럭따위와 같이 굴러 다니는 고정자산 보유물에는 3년의 감가상각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또한 새로운 건물과 기계 및 설비에는 10%의 조세환급을 해주고 굴러 다니는 고정자산 보유물에는 6%의 투자세환급을 제시하고 있다. 가속화시킨 감가상각방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방법은 미국에서 1950년대 중반이후 이용되었던 것이며 그 후에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耐久財의 기계와 설비에 관해서는 조세환급의 혜택을 주는 등 국경제사회에서는 성행하고 있다.

이 Jones-Conable법안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영업세를 인하시키고, 신규투자를 고무시키며, 경제활동위축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북돋아서 생산과 고용 및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감가상각액과 감가상각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난 과소 감가상각의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서, 감가상각기준으로서의 代置原價가, 낮은 자산을 높은 가격으로 代置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회수를 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기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서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뜻이다. 자본원가회수법의 제1의 목표는 생산성과 고용 및 경제성장을 고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세법보다 더 급속한 감가상각을 권장하기 때문에 외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입장을 향상시키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영국은 제1차년도에 100%의 감가상각을 허용했고 카나다는 64.2%, 스웨덴은 48.2%를 허용했다.{{}}"The Capital Cost Recovery Act Proposal" Washington D.C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legislative Analysis, May 1980.)

또 일본은 제1차년도에 설비의 原價를 39.2%를 회수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프랑스는 31.3%였고 서부독일만이 25%이었다.

(4) 그 밖의 제안

공급측면론자들의 말은, 케인즈학파들은 수요에 관한 의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케인즈학파의 유형들은 오늘날의 경제사회의 병폐들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며 생산성을 고무시키는 문제에 중심을 두면서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유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수요를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공급측면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예산과 금융정책들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므로서 경제사회의 생산측면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공급측면론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도록 고무시키며 또 기업들은 새롭고 또 더 능률적인 공장과 기계에 투자하도록 고무시키는 새로운 조세매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급측면 경제학은 경제사회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과 행위들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급측면 경제학이 새롭다는 것은, 그 이론을 공공경제정책의 문제점에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와 재정정책들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공급측면 경제학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정부의 지출정책이 가계와 기업들이 부딪치는 상대적 原價를 변동시켜서 가계와 기업들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케인즈학파들은 재정정책이 가처분소득을 변화시켜서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공급측면론자들은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한다. 즉 공급된 노동력의 규모나 아니면 저축액과 투자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대적 원가가 변동되는 데 따라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한 재정정책의 효과로 소득 총액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급측면 경제학은 가격이론을 정부의 재정정책에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케인즈나 또는 수요측면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소득세를 낮추면 가처분소득이 많아질 것이어서 그 다음에는 소비자수요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다음에는 기업의 수요를 증대시켜서 생산을 증대시키도록 이끄는 노동의 수요와 자본의 수요를 증대시킨다.

공급측면론자에 따르면,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상대적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세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저축을 위해서 세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의 공급과 자본축적이 증가할 것이어서 그 다음에는 생산과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공급측면 경제학의 본질은 상대적 가격변화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또 노동의 형태, 저축의 형태, 투자의 형태 및 눈에 보이는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교한 세율변화들을 고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급측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금공제후의 높은 소득은 시간외근무가 증가하는 것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고무시킬 것이며 또 결근자가 줄어들 것이고 또 실업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말이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토대로 하여 공급측면론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막대한 금액의 개인손실금과 법인의 손실금에 대해서 세금을 인하시켜서 보다 많은 근로와 자본투자를 끌어 들인다.

둘째는, 어떤 형태의 금분위제도로 돌아간다는지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경제사회의 장기적인 잠재적 성장에 맞추어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유지시키는 일이며 셋째는, 정부지출증대를 늦추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국민생산총액(GNP)에 비교해서 낮추면 민간 투자부문의 재정적 자원들을 더 자유롭게 한다.

공급측면 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경제사회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능력을 경제학자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간단한 의미라고 말한다.

케인즈학파들은 공급을 무시하고 유효수요변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케인즈학파의 정책들에게 도전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득액의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조세제도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가 지출과 생산 및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케인즈학파유형의 학설에 또한 도전한다.

이것이 투자와 저축이 감소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생산과 고용 및 소득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출이 수요를 자극하며 또 저축이 수요의 시기를 늦춘다는 케인즈학파의 학설에 도전한다.

저축은 실제로 투자를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데서 좋은 것이다. 더욱이 공급측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저축들은 세금공제후 저축으로 얻은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케인즈학파의 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정부지출은 그 금액이 모두 추가적인 수요로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인하시키면 세금면제액의 일부는 저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것이 소비수요이든 아니면 투자수요이든 간에 수요가 증대되도록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인즈학파의 정책에 따르면 세금인하의 효과는 그와 동등한 정부지출의 증가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보다 적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또한 세금인하와 정부지출의 감소가 동시에 있게 되면 경제활동이 감소되게 이끌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과 관련된 케인즈학파의 신념은, 개인소득세의 인하는 이와 동등한 만큼의 법인세인하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경제사회에 미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법인기업들보다도 개인들이 자기소득액에서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공급측면론자들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세금인하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수익률을 높임으로서 개인들이 저축을 하게끔하는 매력을 증가시킨다. 이 높은 저축은 이자율을 낮추고 투자를 증대시킨다.

(2) 법인세율인하나 아니면 비슷한 대책들로서, 투자에 대한 조세환급을 증대시킨다든가 또는 감가상각방법을 완화시킨다든가 하는 비슷한 대책들은 세금공제후의 평균수익률을 증가시키므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향상시킨다.

(3) 투자가 많을수록 생산성의 증대를 이끄는 것이므로 투입 단위당의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4) 公共부문에서의 생산성의 이득이라는 것은 작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옮겨가는 것은 전반적인 생산성의 증가를 향상시킨다.

(5) 생산성의 빠른 성장은 세금인하 때문에 수요가 일어난 추가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능력(시설)을 제공한다. 그래서 애로점이나 부족품이 없 이 균형성장을 이끈다.

(6) 세금인하의 덕택으로 실질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또 근로자들은 높은 담세계층에 속하게 되어 실질소득의 손실을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일수록 임금인상요구에 더 조심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7)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실질 가치분소득을 증가시키도록 이끌며 그 결과는 소비와 생산 및 고용이 증대된다.

(8) 세율이 낮을수록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며 그 결과는 근로의 량과 質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생산능력을 더 한층 높게 되니까 인플레이션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9) 인플레이션률이 낮을수록 수출증가분이 커지며 이것이 화폐가치를 강하게 한다. 이것은 더 한층 인플레이션률을 감소시키도록 이끄는데 그 이유는 수입된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10) 생산능력의 증대는 국내 소비용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용상품의 생산능력을 증대시켜서 화폐가치의 추가적인 힘을 제공하고 또 수입된 인플레이션이 적어지게 한다.

八. 비평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공급측면 경제학은 고전학파의 경제학과 Say의 법칙의 학설로 되돌아가는 완벽한 복귀가 아니다. 그런데 많은 공급측면 思想의 기초는 고전학파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몇가지 공급측면정책들이 과거에 몇번의 기회에 정책으로서 시행되었었다. 세율과 조세수입 사이의 절대적인 관계에 관해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세율과 일이나 餘暇냐를 선택하는 것 사이의 관계, 세율과 시장에서 非市場행위로 이동되는 것과의 사이의 관계 및 세율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사이의 관계에 관한 많은 참고사항들을 들 수 있다.

Say와 오늘의 공급측면론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서로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소비만을 고무시키는 것은 通商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어려움은 소비욕망을 고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수단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또 우리는 생산만으로도 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좋은 정부의 목표는 생산을 고무시키는 것이고 나쁜 정부의 목표는 소비를 고무시키는 것이다.”(Jean Baptiste Say,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Book 3, p.92, 196.) 그들은 또한 정치경제의 영역속에 있는 실제적인 예들을 인용하는데 그 속에는 유명한 경제 정책입안자들이 오늘날의 공급측면 경제학과 동일한 강력한 주장자들이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정치가이며 또 네차레나 영국의 수상을 지낸 Gladstone(1809-1898)은, 그의 많은 동료들이 반대했지만, 대담하고 용감스러운 계획을 통해서 關稅의 대폭적인 인하를 단행했으며 또 종국적으로 소득세를 없앨 것을 제안했다.

더 최근에는 미국인으로서 윌슨(Wilson)대통령과 Glass재무장관이 공급측면론자들이었다. 1921년에서 1932년까지 세사람의 대통령 밑에서 미국의 재무성장관을 지낸 Andrew Mellon은 공급측면 논리의 세금인하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그가 주장한 것은, 계속적인 戰時 세율은 기업확장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는 조세수입이 낮아진다는 것이었다.

세금인하가 인플레이션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레건(Regan)행정부의 공급측면 경제회복계획은 저축을 고무시키고 투자를 자극해서 생산성을 일으켜서 실질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며 이자율을 낮추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두가지 모두를 감소시키려는 계획으로 작성되었다.

공급측면의 이론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몇몇 금융론자들과 대부분의 케인즈학파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공급측면의 이론이 조세의 고무적 효과를 과장시킨 개념에 근거를 둔다고 말한다. 그 논쟁을 바라보는 한가지 방법으로서는 조세감축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규모에 관한 논쟁이다.

공급측면 경제학자들의 말은 조세감축이 근로와 여가사이의 떠넘기기를 개선시켜서 노동공급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케인즈학파들의 말은 조세감축이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므로 사람들은 현재의 표준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급측면론자들의 말은 조세환급을 인상시키므로서 조세감축은 추가적인 저축을 이끌 것이라는 말이다. 케인즈학파들이 옹호하는 것은, 과거의 저축에서 유래된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저축은 감소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문들은 원리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경험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러 방면에서 공급측면 경제학의 효과는 주로 관념상의 내용이다. 케인즈학파의 경제학은 경제사회에 정부의 간섭이 있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대규모이고 또 증대되고 있는 공공부문에도 정부의 간섭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공급측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격은, 증대되고 있는 공공부문이 또한 민간 경제사회의 상장률을 불가피하게 감소시킬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물가안정과 급속한 경제성장이 모순처럼 보이는 목표들을 조화시키는 한편으로 일반대중에게 보다 작은 정부의 기대를 제공하는 정치적 보수주의를 위해

서 정교한 논쟁을 나타낸다.

공급측면 경제학은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또 다른 공업국가들이 무엇인가 시행했다. 예를 들어서 1981년 봄에 있었던 프랑스의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이 공급측면의 정책들에게 도전했었다. 영국의 대처(Thatcher) 수상은 정부지출을 감소시키고 영국의 경제사회를 덜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공급측면의 정책들을 주장했었다.

이스라엘도 재무장관인 Yoram Aridor가 일찍이 1981년2월에 영업세를 인하했고,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또 조세범위(指標化)의 수정을 통하여 소득세를 감소시켰다. 자산취득세도 역시 인하시켰다.

공급측면정책을 시행했던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고무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도 분위기쇄신으로 의욕고취와 함께 잘살기운동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며 또 소득증대에 이바지했다. 그런데 이 경제성장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이익을 반드시 가져오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가난한 사람에게 반드시 분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경험한 공급측면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첫째로, 공급측면정책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국민생산총액을 증대시키는 데는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소득분배를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공급측면 경제학이라는 말이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소득분배를 변동시킨다면 이것은 반드시 명백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난뒤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고 그 뒤에 경기침체가 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경기침체인데 물가가 안떨어지는 현상이다.

원가압력성(Cost-push)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데, 생산은 가격이 높아야 생산이 증대된다. 또는 수익금이 많아야 공급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해서 이익금을 발생시켜야 하니까 조세감면이라든가, 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또는 기술혁신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금공급이나 이자율 등 정부의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조세감면이 개인의 소비 증대로 이어져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경제사회를 보다 활기있게 유도하는 것은 소비자의 수요라기 보다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에 일본이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아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후의 일본은 1965년까지 선진국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과 최고의 경제성장, 재정수지균형이라고 하는 세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었다. 높은 경제성장에 따라 세율이 낮아도 매년 많은 조세수입이 늘어났고 또 재정이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자연增收分의 일부는 해마다 減稅로 돌려 주었다.

첫째로 일본이 세금을 많이 징수하지 않은 이유는 국방비부담이 적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할 이유가 없었다. 또 일본의 기초공업은 그 기반이 착실했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동안의 戰時생활에서 벗어나

억제되었던 수요가 증대하면서 생산활동이 활발해졌으며 또 과학기술의 발달로 좋은 상품이 개발되면서 수요가 한층 더 증대했고 생산도 활발하게 되었다.

둘째로는 1년이 걸리는 농산물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몇 개월동안의 작업으로 생선과 그밖의 해산물들을 바다에서 공급하여 식량에 큰 보탬을 주었다. 셋째는 동남아시아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일본 상품의 해외수출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한국동란으로 인하여 일본의 산업이 활기를 얻었다.

넷째는 무역정책을 통해서 해외수요가 증대되면서 생산이 활기를 띠어 증가하면서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왔다.

九. 맺는말

낮은 세금, 보다 적은 정부간섭, 제약적인 법률과 규제로부터 더 자유스러운, 증가된 생산성의 필요성 따위처럼 공급측면론자들이 주장한 많은 정책들은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의 저서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케인즈학과분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공급측면 경제학은 없다. 양쪽 모두의 목표들은 똑같이 높은 수준의 고용과 물가안정 및 건전한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수단과 제안들은 다르다. 따라서 건의한 경제정책과 대책들도 다르다.

케인즈학과들은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제1차적으로 유효수요의 조작에 의지한다. 케인즈학과들은 공급이 수요에 따라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들을 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

공급측면론자들은 소득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서 저축과 투자와 생산성 및 생산액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급측면론자들이 가정하는 것은, 소득의 증가는 유효수요의 증가를 이끌 것이라는 가정이다.

케인즈학과들이 제시하는 것은, 저축 특히나 투자되지 않은 것이 경제활동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공급측면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축 또는 최소한도로 말해서 세금공제후의 소득의 증가는 근로의욕을 고무시키고 또 투자할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저축액들이 투자되지 않을 것이라는 케인즈학과의 가정은 아마도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반해서 공급측면론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저축액은 투자로 흘러 들어갈 것이며 또 근로의욕을 고무시킬 것이라는 맞지 않는 가정을 할 수도 있다. 현실은 이 두가지 가정의 중간쯤이 가능하다.

공급측면론자들은 공급을 증대시킬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케인즈는 공급측면의 작용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증대시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케인즈의 총합적 수요와 총합적 공급관계의 구조에 따르면, 공급(가격)의 감소는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케인즈의 공급은 사실이지 공급가격이다. 공급가격이나 또는 공급의 원가를 낮추면 보다 많은 이익금이나 또는 보다 많은 생산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내용은, 공급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서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생산원가를 낮추기를 원하는 공급측면론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공급측면론자들이 생산성과 생산액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건의한 세금인하라든가 조세환급 및 가속화시킨 감가상각방법 따위의 몇가지 수단들은 투자를 증대시키고 원가를 억제하며 또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서 케인즈학과들도 역시 찬성할 것이다.

사실은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1960년대초에 미국에서 실업이 경제사회의 괴로움이었다던 때에 이용되었었다.

공급측면 경제학에 부과된 때때로의 비평은, 납득할 수 있는 類型이 없다는 것이며 또 數値로서 충분한 計量化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할 것은 케인즈학파의 경제학이 원래는 類型이 부족했고 또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는 소비함수의 안정성과 같은 증명되지 않은 수많은 假定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이라는 경제상의 재앙이 케인즈학과 또는 수요측면정책들의 적용의 길을 닦은 것처럼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좌절과 불안한 상태가 공급측면정책의 적용을 불러들였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1980년대는 공급측면이론의 시험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면서 보다 좋은 공급측면의 유형을 갖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또 새로운 정책들의 효과에 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역시 1990년대말까지는 공급측면의 생각이 더 구체화될 것인지? 또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어서 멀리 사라져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제학으로 케인즈학파의 수요분석을 代置시키는 것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수요관리와 융합되어서 계속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Evans, Michael K. "The Bankruptcy of Keynesian Econometric Models." Challenge, January-February, 1980.
- Forman, Leonard.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Real World." Challenge, November-December, 1980.
- "A Guide to Understanding the supply-side." Business Week, December 22, 1980.
- Humphrey, Thomas M. "Keynes on Inflation."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January-February, 1981.
- Keleher, Robert E. "Supply-Side Effects of Fiscal Policy: Some Preliminary Hypothesis." Research Paper Series No.9,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1979.
- Kellner, Irwin L. "An Essay on Keynesian Economics." Economic Report, Manufacturers Hanover Bank, November, 1980.
- Keynes, John Maynard.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64, New York.
- Lucas, Robert E. Jr. "The Death of Keynesian Economics." Issues and Ideas, Graduate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Chicago, Winter, 1980.
- Raboy, David. "Norman E. Ture on Supply-side Economics." Enterprise, June, 1980.
- "Reagan's Top Problem : Braking Inflationary Expectations." Business Week, December 1, 1980.
-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Clarendon Press, Oxford, 1976.
- Supel, Thomas M. "Supply-Side Cuts : Will they Reduce Inflation?" Quarterly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Fall, 1980.
- Wanniski, Jude. "The Laffer Curve and Foreign Policy." Wall Street Journal, March 2, 1981, p.14.
- "A Warning to Reagan on Kemp-Roth." Business Week, August 11, 1980.

ABSTRACT

The changes of economic thought(The trial of supply-side economics)

Many of the measures and policies advocated by supply-siders, such as lower taxation, less government intervention, more freedom from restrictive legislation and regulation, and the need for increased productivity can be found in writing the classical economist.

Nor is supply-side economics a complete divorce from Keynesian analysis. In both camps the objectives are the same-high level employment, stable prices and healthy economic growth, the means or suggestions for attaining the objectives, however, differ. Consequently, recommended economic policies and measures are different.

Keynesians rely primarily on the manipulation of effective demand to increase output and employment and to combat inflation. They assume ample resources to be available in order that supply will respond to demand.

The supply-siders emphasize the need to increase savings, investment, productivity and output as a means of increasing income. Supply-siders assume that the increase in income will lead to an increase in effective demand.

Keynesians suggest that savings, particularly those not invested, dampen economic activity. Supply-siders hold that savings, or at least an increase in after-tax income, stimulates work effort and provides funds for investment.

Perhaps Keynesians are guilty of assuming that most savings are not going to be invested, whereas supply-siders may erroneously assume that almost all savings will flow into investment and/ or stimulate work effort. In reality, a middle ground is possible.

The supply-siders stress the need to increase supply, but Keynes did not preclude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economic activity by working through the supply side.

According to Keynes' aggregate demand-aggregate supply framework, a decrease in supply will increase output and employment. It must be remembered, however, that Keynes' aggregate supply is really a supply price. Lowering the price or cost of supply would there by result in higher profit and/ or higher output. This coincides with the viewpoint of supply-siders who want to lower the cost of production via various means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supply.

Then, too, some of the means, such as tax cuts, tax credits and accelerated depreciation,

recommended by supply-siders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output would be favored by Keynesians also as a means of increasing investment, curbing costs, and increasing effective demand.

In fact, these very measures were used in the early 1960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years when nagging unemployment was plaguing the economy.

Keynesians disagree with the supply-siders' proposals to reduce transfer payments and slow down the process of income redistribution, except in full employment inflationary periods.

Keynesians likewise disagree with tax measures that favored business as opposed to individuals and the notion of shifting the base of personal taxation away from income and toward spending.

A frequent criticism levied at supply-side economics is that it lacks adequate models and thus far has not been quantified to any great extent. Bu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Keynesian economics originally was lacking in models and based on a number of unproved assumptions, such as, the stabilit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with its declining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Just as the economic catastrophe of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paved the way for the application of Keynesian or demand-side policies, perhaps the frustrating and restless conditions of the 1970s and 1980s is an open invitation for the application of supply-side policies.

If so, the 1980s and 1990s may prove to be the testing era for the supply-side theories. By the end of 1990s we should have better supply-side models and know much more about the effectiveness of supply-side policies. By that time, also, supply-side thinking may be more crystallized and we will learn whether it is something temporary that will fade away, be widely accepted as the new economics replacing Keynesian demand analysis, or something to be continued but melded or fused with demand management.